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 노선 전환 의도와 대응

오 경 섭(기획조정실장)

Online Series

2024. 1. 2. | CO 24-01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론을 통해 대남 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 노선을 제시했다. 핵심 내용은 남한 체제의 성격, 남북 관계의 성격, 통일전략, 대남 부문 조직 개편 등이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 노선은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하고, 핵무력을 통한 무력 통일을 전면에 부각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이는 남북한의 국력 격차,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남한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됐다고 보인다.

첫째, 통일전략은 연방제 통일(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핵 무력을 사용해서 남한의 영토를 평정하는 무력 통일론을 제시했다. 그동안 북한의 통일전략은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다. 하나는 무력 통일 노선이다. 다른 하나는 남한의 지하당 주도로 민중봉기나 선거 투쟁을 통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성공시켜 친북 정권을 수립하고, 북한 주도로 남한을 병합하는 연방제 통일 노선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북한 주도의 연방제 통일을 위한 수십 년간의 노력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핵무력을 이용해서 남조선 영토를 평정하는 무력 통일을 선언했다. 대적·대외사업 부문에는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있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향후 대적·대외사업 부문은 무력 통일을 준비하는 인민군을 지원하기 위해 대남공작과 정보수집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둘째, 남한 체제의 성격은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했다.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출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이고, “사회전반이 양키문화에 혼탁되었으며 국방과 안보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속국”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라



는 북한의 대남 인식을 재차 강조했다.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이므로 대등한 대화와 통일의 상대가 아니라 무력으로 평정해야 할 해방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셋째, 남북 관계의 성격은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라고 단정했다. 남북 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라고 선언했다. 김정은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산될수 있다”고 진단했다. 남북 관계는 대화나 교류 협력의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을 기정사실화했다.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설정한 만큼 고강도 대남 군사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대남·통일 노선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는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들을 정리·개편하고, 대남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 기구들의 정리·개편 방향은 2가지로 진행될 것이다. 우선 남북 경협과 교류 협력 관련 기구들은 대폭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이다.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은 과거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이 활발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비대해진 조직과 인력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남북 관계를 단절된 상황에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통일전선부 산하 조직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민족화해협의회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적 수단을 활용해서 대남공작을 수행하는 대적·대외사업 부문은 대폭 강화될 것이다. 대남공작 부문은 2009년 초 당 작전부, 35호실, 인민무력부 정찰국을 통합해서 창설한 정찰총국에서 담당한다. 작전부의 임무는 남한이나 해외에 파견되는 공작원을 안내해서 안전하게 침투·복귀시키고, 필요에 따라 무전기와 무기 등 공작용 장비 운반이나 요인 테러 및 납치 등 특수임무를 수행한다. 35호실은 해외에서 북한의 대외·대남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 수집, 마약 밀매·위폐 교환 등 통치자금 조성, 요인 납치 및 테러 등 특수임무를 수행한다.

대적·대외사업 부문의 역할은 남조선 영토 평정을 위한 조선인민군의 군사행동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남공작, 사회 불안정 조성 등이다. 대남 투쟁원칙과 방향 전환은 핵무력을 통해 영토 평정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고강도 군사도발을 통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집권 12년 만에,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5년 만에 대남 무력 통일 노선을 선언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김정은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핵국가로 승인받기 위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 전략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장기적으로 수행된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 전략은 체계적이다. 먼저 북한은 전술핵·전략핵무기를 대량생산·실전배치해서 핵보유국으로 행동한다. 또한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확산시킨다. 북한 핵포기 불가론은 핵무기보유국법, 핵무기정책법, 헌법 등으로 강화된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 마지막 관문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핵군축론이나 핵비확산론을 올리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이 핵군축론과 핵비확산론을 꺼내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승인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그런데 평화로운 한반도는 미국과 한국의 북핵 정책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심각한 군사적 긴장과 무력 충돌을 일으켜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미국과 한국이 핵군축론과 핵비확산론을 꺼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북핵 문제에서 미국과 한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 올린다고 예고했다.

둘째,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건설 노선에 대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코로나19 국경봉쇄,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식량난과 경제위기가 심화했다. 식량난과 경제위기가 심화할수록 핵무력 건설 노선에 대한 경제관료, 무역회사와 무역일꾼들, 시장 참여자, 인민들의 불만도 커진다. 김정은이 지적한 경제일꾼들의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는 핵무력 건설 노선에 대해 경제일꾼들이 저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는 대북제재 상황에서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발전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건설에 대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인민들과 간부들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남한을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핵무력을 통한 영토 평정을 주장했다.

셋째, 김정은 정권은 남한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동경과 추종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 대남·통일 노선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한류는 간부들과 인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켰다. 간부들과 인민들은 남한을 동경하거나 추종하고, 친남한적 사고가 만연하면서 남한이 적이라는 생각도 무더진 것으로 보인다. 한류의 확산은 북한 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류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국가비밀보호법 등을 제정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많은 량의 적대국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 유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김정은 정권은 간부들과 인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과 추종을 근절하고, 체제 위협 요인인 한류를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남·통일 노선 전환에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첫째, 한국 정부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 억제 강화,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3축 체제 구축



등 북핵에 대한 강력한 억제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의 군사도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하면, 압도적으로 강력하게 응징함으로써 대남 군사도발에는 더 이상 관용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빈틈없이 시행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해킹을 통한 불법 자금은 완전하게 차단해야 한다.

둘째,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 북한 주민과 간부들에게 자유민주적 통일 정책의 기본 입장을 홍보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을 자유민주적 통일국가에서 자유와 인권, 경제적 번영을 누릴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며, 비핵화 시 대규모 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 현대화를 지원할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북한 내부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한류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북한 내에서 한국의 TV방송과 라디오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국정원과 경찰은 대공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대적·대외사업 부문은 무력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남공작과 정보수집을 공세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에서 경찰로의 대공 수사권 이전은 간첩 수사에 허점을 노출함으로써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는 대공 수사권 이전으로 인해 간첩 수사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한국 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체를 통해서 대북 제재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하고, 동맹국·우방국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군축론이나 핵비확산론은 즉각 비판하고 반대해야 한다. 한국의 전문가들이나 정책결정자들은 핵군축론과 핵비확산론의 전제조건은 한국의 핵무장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KINU 202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